“킨텍스가 상장사?” 감사 자질 논란

고양시의회 킨텍스특위, 제4차 사무조사…증인 불출석·증언 거부 ‘시끌’

고양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 공정성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킨텍스특위)는 고양시와 킨텍스를 대상으로 제4차 사무조사를 진행했다.

14일 실시한 이번 조사는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고양시의 지도·감독 책임 및 인사 추천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킨텍스특위는 지난 5월 구성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시작 전부터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인해 의원들로부터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주요 증인인 이동환 고양시장은 관외 출장을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회의 참석을 사유로 제3차 조사에 이어 이번 제4차 조사에도 불출석했다.

이번 4차 회의에 추가로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 역시 병원 진료를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최규진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무조사에 핵심 증인이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숨길 것이 없다면 당당히 사무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킨텍스특위 모습.(사진=고양시의회)

신인선 시의원은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조사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며 킨텍스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킨텍스특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학영 의원이 “킨텍스가 상장회사인지 비상장회사인지 알고 있냐”고 질의하자 엄 감사는 “상장회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킨텍스는 비상장회사”라며 “킨텍스 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킨텍스는 경기도,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출자한 공공 성격의 기업으로 증권시장 비상장 회사다.

또한 증인들의 증언 거부 역시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는데,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가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2명 가운데 당시 현직 공무원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나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던 과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송 의원은 “공무원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증언 거부며 이러한 태도가 킨텍스 감사 관련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킨텍스특위는 증언 거부가 계속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고양시의회, 킨텍스 현장방문 ‘헛걸음’ (623호 보도)

최정석 기자
standarf@gsdaily.co.kr

서울시, ‘지하안전자문단’ 운영 강화

지반침하 징후·사고 시 현장출동…방지대책 마련

서울시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지반 안전 관련 전문 학회 3곳과 ‘지반침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개발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하 안전과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와 3개 학회는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지하안전자문단’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지반침하 징후가 발견되거나 사고가 발생해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할 때, 현장에 출동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복구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반침하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전문가 중심의 지하안전자문단 운영을 통해 지반침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

▲안전보안관들이 빗물받이에 쌓여 있는 낙엽과 쓰레기를 걷어내고 있다. (사진=고양시)

고양시, 집중호우에 안전보안관 긴급출동

빗물받이 낙엽·쓰레기 제거…교통 통제 등 선제적 조치

고양특례시는 13일 고양시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보안관 70여 명을 즉시 현장에 긴급 출동시켰다.

이날 덕양구청 인근에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11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으며. 시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 지역에 비상 출동을 지시하고. 시민 생활권 내 위험 요소 제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주택가와 주요 도로변의 빗물받이를 막고 있던 낙엽과 쓰레기를 신속히 제거하고 배수 기능을 점검해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조치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차량 통행이 잦은 구간에서는 일시적인 교통 통제 및 우회 안내를 통해 2차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 준 안전보안관들께 감사하다”며 “고양시는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향후 추가 호우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조재호 기자

jhcho@gsdaily.co.kr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상 첫 동시 구속

▶1면에서 이어

특히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등 김건희 씨 측근 인물들의 추가 구속도 이어지고 있어 수사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있다.

김예성 씨는 IMS모빌리티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으며 해외 도피 후 귀국 즉시 체포됐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실현 여부를 증명하는 중대한 국면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추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재판 종료 시까지 계속해서 수감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 역시 장기간 재판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사례는 권력형 비리 척결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향후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점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의 구속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부부 동시 수감이라는 사상 초유이면서도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다.

부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혐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추가됐으며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무려 16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자 추가 소환 및 기소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내란죄 적용 및 김건희 16가지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최정석 기자

서울시 “불법 전단 근절”

서울경찰청과 MOU 체결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불법 의약품, 대부 광고 등이 담긴 전단지를 주 1회 이상 수거하고,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곧바로 ‘대포킬러’ 시스템에 등록해 1~2일 안에 해당 통신사에 번호 사용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포킬러’는 불법 전단에 적힌 대포폰 번호에 2~3초 간격으로 계속 반복전화를 걸어 통화 중 상태를 만들어두는 시스템이다. 시민과 업자 간 연락 자체를 차단해 불법 거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목적으로 서울시가 2017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 이번 협약을 통해 길거리와 상가 앞은 물론 학교 인근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불법전단 광고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
jhcho@gsdaily.co.kr